

# 국민에 더 가까이, 환경부 예산 5조원 시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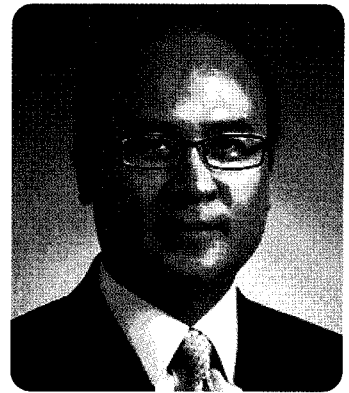
정연만 |

환경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석사),  
[미]워싱턴메디슨대(공공정책학 석사), 동아대학교(환경법 박사)  
환경부 대기관리과장, 환경평가과장, 국토환경보전과장, 수질정책과장, 총무과장,  
수질보전국장, 홍보관리관, 금강유역환경청장, 자원순환국장, 자연보전국장 등 역임  
tel. 02-2110-7939 | yjeong@korea.kr

예산 원칙 중 하나로 '예산기획의 원칙'(Principle of Executive Budget Programming)이라는 것이 있다. 예산은 한마디로 정부의 사업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일은 예산으로 구체화된다.

사람을 판단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려면, 그 사람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 보라고 한다. 정부를 평가하는데도 이 기준은 정확히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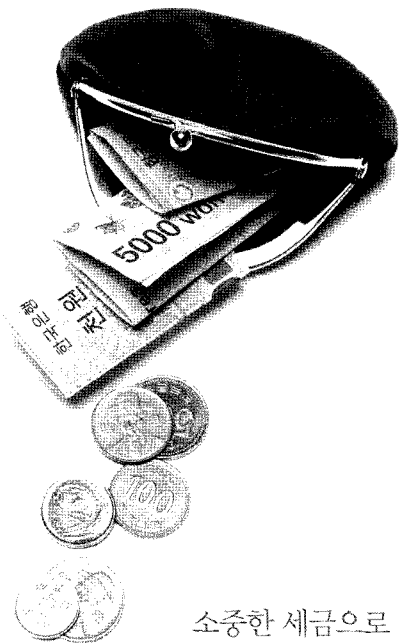
**환경부** 예산규모가 5조원을 넘어섰다. 환경행정 사상 처음으로 예산 5조원 시대를 열어, 환경정책을 보다 힘 있게 집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고들 평가 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 3조 5,000여억원에 비해 4년만에 50%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2008년과 비교할 때,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경우 6배, 석면 안전관리,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대비 등 환경보건 분야의 경우에도 2배 가까이 예산이 늘어났다.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과 국민의 아픈 곳을 보듬어 주는 곳에 사업 예산이 늘어난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 내용을 보면, 역시 환경분야 대표 사업은 하천의 수질 개선이다. 하천은 원래 사람이 살고, 추억을 담은 공간이었다. 천렵으로 잡은 물고기를 이웃들이 나누고, 동네 도랑에서 물놀이 하던 기억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실 것이다. 어느 순간 냄새나고 흉한 모습으로 변해 버린 강, 아예 복개 공사로 덮여 외면해 온 도심 하천을, 이제 원래 모습으로 되돌려야 한다. 하천을 친수 공간으로 살려, 우리의 기억과 감성까지 돌려받기 위한 노력이 이번 예산에 담겨 있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 서민들의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갈수록 국민들의 야외 활동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여름철 자연공원 야영지는 몇달전 예약을 해야만 간신히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네이처지가 자연생태의 전체 가치를 400조~500조 달러, 매년 자연생태계가 인류에게 베푸는 서비스의 가치를 연간 36~58조 달러로 평가하였다는 몇 년전 소식이 새삼 피부에 와 닿는다. 당시 세계 총생산이



38조 달러 수준이었으니, 자연은 그 존재만으로도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셈이다. 자연이 가진 잠재력을 깨워,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생태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도 내년 예산에서 비중을 두고 있는 분야다. 국립공원, 습지, 생태경관보전지역이 더 잘 보전되고, 생태탐방로, 둘레길, 도시녹색길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위해물질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어린이 활동공간, 어린이용품 안전관리 확대 등 환경보건 분야에도 투자가 확대된다. 장난감에서 이름도 생소한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었다는 뉴스, 어린이 놀이터에서 중금속과 기생충 알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많은 부모님들이 불안하셨을 줄 안다. 내년 관련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유해 어린이용품과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진단 등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하여 다시는 어린이와 관련된 불안한 소식이 들리지 않도록 한층 노력하겠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먹는 물 환경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 가구 2,7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옥내급수관 개량을 지원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시에 수도관을 바꾸어 주면 좋겠지만, 예산이 만만치 않다. 그래서, 생수를 사 먹기 부담스러운 가정을 녹물이 나오지 않는 깨끗한 관으로 바꾸어 주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외에도 자연환경 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하고 싶은 사업들, 필요한 예산이 참 많다. 화수분이라도 있으면, 평평 내 쓰고 싶을 때가 한 두번이 아니다. 하지만, 국민 세금으로 모아진 나라돈이 어디 아무데나 쉽게 쓸 수 있는 돈이던가. 결국 주어진 부처별 예산 한도내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매기고, 허리띠를 졸라 매어야 새로운 정책 예산이 반영된다. 각각의 사업이 필요한지, 반영된 예산이 적정한지에 대해 예산당국과의 치열한 논리 대결과 논의를 거쳐야 부처의 정부 예산(안)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2012년도 환경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민들 보기에 중요한 일들이 예산 부족으로 잠자지 않도록 치열하게 준비하였다. 예산이 시급히 필요한 사업은 예산당국을 수시로 찾아가 관련 예산을 반영해 주도록 '예산 타령'도 무던히 해 댔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을 고민하고 관계부처를 설득하느라 주말·야간 구분없이 노력한 끝에, 환경 예산(안)을 만들어 지난 10월 국회에 제출하였다. 수계기금, 석면기금 등 환경관련 기금을 포함하면 6조원에 가까운 규모다. 정부 예산안이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국회의 승인과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예산은 정부가 해야 할 사업에 대한 국민의 명령이라고 한다. 단순한 회계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살림살이 규모가 늘어나면 책임도 더 커지는 법. 국민이 주신 예산, 알뜰히 사용하겠다는 말씀 드리며, 내년말에는 소중한 세금으로 어떤 일들을 하였는지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 한다. 예산으로 구체화되는 국민의 명령 수행에 어긋남이 없겠노라 다시 한 번 다짐하며, 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부탁드립니다.